

민간 따라하기

정 범 진 |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학사, 석사, 박사
과학기술부 원자력국 사무관
영국 맨체스터대학교 연구원
제주일보 논설위원(2002~)
제주대 에너지공학과 교수(2002~)
미국 플로리다대 교환교수(2007. 1 ~
2008. 2)

공무원, 공공 부문 그리고 공권력에 대해 부정적 시각이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되기 위해 준비하거나 기왕이면 공공 부문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젊은이는 증가일로에 있다.

공무원 월급을 동결하고 숫자를 줄인다고 하면 대부분 환영한다. 물론 재임 시절 공무원의 숫자를 늘린 대통령은 칭송받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TV에서 방송되는 모든 사회 고발 프로그램은 이 사회의 구석진 부분에까지도 정부의 관심과 공공의 손길을 절실하게 요구하는 것으로 맺어진다.

공무원의 수는 줄이고 공공 서비스의 질은 향상되기를 요구하는 우리의 기묘한 상식은 어느 구석에서 놓고 있는 공공이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성립한다. 우리는 때로 양립되기 어려운 원칙들의 타협점 찾기와 같이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숙제를 공공부문에 주문하기도 한다. 또 모든 골치 아픈 문제에 대한 보편타당하고 간단한 해소 방법으로 공공 부문을 두드리기도 한다. 때로는 이 답은 정답이 되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기도 하다.

이러한 공공 부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반관반민이라는 신화적 단어도 만들어 낸다. 관이면 관이고 민이면 민이지, 반관반민은 뭔가? 무조건적인 민간 따라하기, 그리고 민영화 역시 이러한 정서에 기초를 둔 공공 부문 때리기의 일환으로 환영받는 정책이 되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간 따라하기 또는 민영화에 대해서 몇 가지 고려해볼 사항이 있다.

만일 공공 부문의 비효율성이 공공성과 도덕성에 기인된 것이라면, 비효율성은 개선의 대상이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산간 오지 마을에 전기 설비를 공급하는 것과 같이 공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투자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비효율 그리고 강패를 동원하는 대신에 대화와 설득을 시도하는 것과 같이 도덕적으로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 발생한 비효율은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민간 부문이 무자비한 감원과 엄청난 인센티브와 같이 공공 부문에서 구현하

기 어려운 탄력성으로 인하여 효율을 높이고 있다면 이 또한 공공 부문이 흉내 내기 어려운 부분이다.

과연 민간의 어떤 부분을 공공이 따라야 하는 것일까? 또 공공과 민간이 그렇게 서로 따라할 만큼 같은 것인가?

영국은 우리가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할 때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되는 나라이다. 영국의 사회 간접 자본 유지 관리와 사회 보장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식민지에서 들어온 막대한 자금을 토대로 구축된 것이기 때문에 세금만으로는 유지되기 어렵다. 그렇게 되자 국유 재산을 팔아서 정부의 재정을 확보하는 수단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졌다. 효율화는 표면적으로 내세운 명분일 뿐이었다. 그런데 우리의 민영화는 영국 민영화의 명분을 목적으로 하는 듯이 보인다.

민영화를 단행하여 공공 부문을 매각하면 이윤을 남길 수 있는 부문만 선택적으로 팔려나간다. 결국 이윤을 남길 수 없는 부문은 팔리지 않고 남아서 재정 적자를 가중시킬 것이다.

영국 정부는 Bauxhall이라는 자동차 회사를 BMW에 매각했었다. 이것이 경쟁력이 없어지자 BMW는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영국의 노동자들은 연일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데모를 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BMW는 공장 폐쇄 계획을 취소한다. 아마도 영국 정부는 보조금을 약속했을 것이다. 외자 유치 혹은 시설의 해외 매각에 의해 자국 노동자가 볼모로 잡힌다는 점도 고려되어야 한다.

영국 철도는 민영화 이후 엄청난 이윤을 남겼다. 민영화의 성공적 사례로 부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몇 년이 지나 Paddington 역에서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조사 결과 철도 회사는 철도에 대한 안전 점검과 기능 인력의 삭감을 통해서 이윤을 창출한 것이 드러났다.

전기의 민영화 이후, 발전 사업자는 더 싸게 전력을 공급하라는 배분 사업자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듯이 보인다. 즉 2차 산업을 죽이고 3차 산업을 살림으로써 사회 간접 자본의 감소에 기여하는 듯이 보이기도 한다.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민영화를 단행한 나라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나라가 어떻게 민영화를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사를 했지만 그래서 그 결과가 좋았는지에 대해서는 고개를 돌려서 살펴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공공과 민간은 엄연히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한쪽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따라하려는 것은 사자가 채식주의를 선언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 오래지 않아 우리는, 몇몇 유명한 미국계 컨설팅 회사가 만들어낸, 민영화라는 개념에 전 세계가 놀아났다는 것을 깨닫게 될지도 모른다. ☹

과연 민간의 어떤 부분을 공공이 따라야 하는 것일까? 또 공공과 민간이 그렇게 서로 따라할 만큼 같은 것인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다면 이미 민영화를 단행한 나라에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보아야 한다.

공공과 민간은 엄연히 업무의 성격이 다르다. 한쪽이 더 좋아 보인다고 해서 따라하려는 것은 사자가 채식주의를 선언하는 것과 같을지도 모른다.